

제3차 당대표자회 분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의 과학기술정책

변 상 정*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의 과학기술정책 |
| II.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결과 분석·평가 | IV. 결론 |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와 향후 정책방향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한 데 이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고,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3대 세습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김정일이 위원장이고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당, 군, 공안, 군수경제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포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영도에 의한 선군정치를 더욱 완성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식 CNC화'를 통한 북한의 산업재건과 생산성 향상 노력은 이미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증시정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전략은 북한 체제의 발전경로, 즉 주체사상, 폐쇄적 계획경제와 경제-국방 병진노선 등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무엇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보다 '체제위협적' 대외환경 변수에 종속되어 여전히 '주체과학'과 '주체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제어 : 당대표자회, 김정은, 후계체제, 과학기술정책, CNC

I. 서론

북한은 지난 9월 28일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일 총비서 재추대, 당 규약 개정, 중앙 지도기관¹⁾ 선거 등 3개항의 의제를 토의·결정했다.²⁾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金正恩)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고, 이어서 열린 전원회의³⁾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했다.

또한 북한은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고치면서 "(북한은) 김일성 조선"이라고 명기했다. 1980년 채택된 노동당 규약 서문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서문 첫 문장부터 '맑스-레닌주의'를 빼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4월에 개정된 헌법 서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라고 고쳐 '김정일의 영도성'을 부각시켰다.⁴⁾ 그 외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서

- 1)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중앙 지도기관 또는 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한다.
- 2) 「조선중앙통신」은 당대표자회가 "1.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3.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의 의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8일.
- 3)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첫 번째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당중앙위원회 2010년 9월 전원회의'로 명명했다.
- 4)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제기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안은 김일성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서와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새로 반영하고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전일체로서의 당의 특성에 맞게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하였다." 「당규약개정에 대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서」,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8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로, 최종 목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고쳤다.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이 ‘인민들의 공화국’이 아닌 김씨 3대의 ‘왕조국가’임을 천명한 셈이다.

북한은 이미 2007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을 중심으로 김정은 ‘권력승계팀’을 은밀히 가동해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대적인 위상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핵심인 ‘기계공업부문의 CNC화’와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는 후계자의 업적 쌓기의 일환이고, 여전히 ‘개혁개방’이 아닌 ‘주체과학’과 ‘주체경제’에 의거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12년 경제강국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년의 북한 정권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전략·전술을 그간 축적한 인적·물적 자료(data), 정보(information)와⁵⁾ 지식(knowledge) 등을 활용해 당대표자회 개최를 기점으로 하여 역(逆)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많은 ‘모호성’이 명확해진다. 본 논문은 먼저 이번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와 향후 정책방향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인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를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 엘리트들에게 후계논의 금지 지시를 내린 2005년 12월 이후 김정일 자신의 영구집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006년 10월부터 2008년까지의 시기와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한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 28일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당대표자회 개최 시점까지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대외환경, 리더십,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나타난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였다.

5) 인적 정보(휴민트: HUMINT, Human Intelligence)는 정보원이나 내부 협조자 등 인적(人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를 말하며, 스파이를 활용하는 첩보 활동이 휴민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전통적인 휴민트 외 특히 최근 김정일 후계문제와 화폐개혁 관련 정보의 발표를 통해 민간 대북 언론정보 활동단체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 대북 언론정보 활동을 하는 단체로는 좋은벗들, NK데일리, 열린북한방송 등이 있으며, 탈북자 단체로는 자유북한방송, NK지식인연대 등이 있다. 이들 단체의 북한 정보수집방법은 주로 탈북자들과 연계해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 내 가족, 친구,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유선방송 내용을 정리하기도 한다. 정보전달방법은 핸드폰이 가장 효율적으로, 북·중 국경지방의 경우 중국 핸드폰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 물론 이들 단체의 선입견 등으로 인한 정보왜곡현상, 단체간의 경쟁심으로 인한 자극적인 정보 생산과 확대 보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사실 여부에 대한 정밀한 확인과 다른 정보와의 교차검증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 엘리트 탈북자들의 증가와 북한 내부의 동요도 북한 내부정보의 유출로 연결되고 있다. 열린북한방송 주최 「열린북한통신 1주년 기념 세미나」, 2010년 1월 11일 참조.

Ⅱ.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결과 분석·평가

1. 당대표자회 개최 목적

1) 조선노동당의 위상·기능 복원

44년 만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는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당 장악력 저하에 따라 정치국 기능을 복원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체계를 강화하고, 표면상 노동당의 국가정책결정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최된 것으로 분석된다.⁶⁾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과거에는 김일성이 당을 통해 각 분야의 장악과 정책지도를 실현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비록 형식적이나 당대회 또는 전원회의의 개최 없이 오직 서기실을 통한 비준제도와 측근정치로 각 분야를 직접 장악, 통치함으로써 노동당의 정책지도 기능이 무력화되었던 것이다.⁷⁾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방식은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이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위원회가 김정일 위원장을 보좌하는 과도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의 당의 제도적 기구정비는 결국 김정일이 당을 통해 북한 사회를 장악·통제하는 전통적 통치방식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2) 김정일의 권위 회복과 권력누수 차단

와병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특히 후계문제 부상과 함께 권력누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당대표자회에서의 김정일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와 대대적인 김정일 우상화는 이러한 권위 하락과 권력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44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지난 8월 중국 동북지역의 ‘김일성의 혁명 사적지’를 순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각인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김정일’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동안 선군정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전군(全軍)대회가 이어지며 ‘장군님’의 호전적 이미지는 만들어졌으나 ‘인민의 영도자’, ‘당총비서’의 이미지는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정된 당 규약에서 노동당을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 아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북한을 ‘김일성 조선’⁸⁾으로 명기했다.⁹⁾ 이번 당 규약 개정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6) 「조선신보」는 “이번에 열린 당대표자회는 지난 10여년간의 선군정치사를 반영했으며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모부인 당의 영도적 역할을 더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신보」, 2010년 10월 2일.

7) 이에 대해서는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을 참조.

8) “당규약개정에 대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서”,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8일.

9) 북한이 ‘노동당은 김일성 당’, ‘김일성 조선’ 같은 표현을 쓴 것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다. 통

3대 권력세습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당대표자회 개최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해 권력누수를 차단하고 ‘선친의 혁명의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김정은으로의 후계작업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를 대내외에 공식화했다.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을 대신하는 실질적인 위원장 직책과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비서국과 같은 상설 조직이 아닌 협의체이므로 실질적인 권력 장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이 10월 10일 당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군부의 충성 맹세를 받는 형식으로 공식 데뷔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시 수시로 동행하며 정책 관여의 폭을 확대하여 왔고,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청년대장동지’ 등 찬양시와 노래를 보급하고 암송경연대회를 여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⁰⁾ 북한은 2007년 초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등 최측근들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작업을 은밀히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¹¹⁾ 그런데 9월 28일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통해 전격적으로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를 대내외에 공식화했으나 후계권력 기반조성을 위한 확실한 권력장악 단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¹²⁾ 즉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후계자 수업→후계자 공식화’ 절차가 아닌 ‘후계자 공식화→후계자 수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 경제난과 주민들의 불만 증대 무마

한편,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남한의 5.29 대북제재조치,

일부는 검색 결과 노동신문 1995년 4월 16일자부터 ‘김일성 조선’ 표현이 등장했고, 이후 북한 관영매체와 공식 석상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10)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계기로 ‘발걸음’이라는 충성의 노래 모임이 보급되고 있고, 김정은이 업적·경험 쌓기 단계에서 정책관여 단계로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2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중앙일보」, 2010년 2월 24일.
- 11) 「열린북한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의 서기실에 ‘김정은 권력승계팀’을 구성해 김정은의 후계자 등장을 준비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공식 직함이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 대표자회 개최 전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고 보도했다. 「열린북한방송」, 2010년 10월 2일.
- 12) 북한의 당-국가체제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당 조직지도부의 요직(당 조직비서, 조직지도부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군에서는 총정치국의 요직(총정치국장이나 조직 담당 제1부국장)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조치(행정명령 13551호)와 화폐개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난의 심화¹³⁾와 주민들의 불만 증대¹⁴⁾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김정일 후계자 공개와 당 중앙지도기관의 인적 쇄신을 통해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의 유훈인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초조감을 보인 바 있다.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작년 현지지도에서 “수령님의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¹⁵⁾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이 ‘인민생활 향상’을 최대 목표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마저 식량 배급이 어려울 정도인 경제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의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재편 결과 및 특징

1)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이 유임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내각총리 최영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새로 임명되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의 출범을 의미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과 장성택의 정치국 상무위원 임명 예상을 깨고 당·정·군의 수장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리영호가 장성택의 측근임을 감안할 때 이번 상무위원회가 사실상 장성택의 권력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정치국 위원에는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리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가 선출되었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는 김양건, 김영일, 박도춘, 최룡해, 장성택, 주규창, 리태남, 김락희, 태종수, 김평해, 우동측, 김정각, 박정순,¹⁶⁾ 김창섭, 문경덕¹⁷⁾이 선출되었다. 강석주 내각 부총리가

13) 지난해 화폐개혁 이후 북한 상황이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기보다 더 어려워져 금년 7월부터 굶어 죽기 직전에 사생결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이 급증했다. 중국 공안당국이 체포한 탈북자 수가 1999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이다. 「자유북한방송」 허민섭 국장 인터뷰 내용, 2010년 9월 16일.

14)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화폐개혁으로 인한 총체적 후유증에 직면해 있고, 공산품 거래를 금지했다가 재허용하는 등 추진했던 정책이 후퇴하고 주민과 당국 간 갈등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일보」, 2010년 2월 24일.

15) 「로동신문」, 2010년 1월 9일.

16) 전문 당관료 출신으로 과거 평안남도 당 조직비서 및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의 직책을 갖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김정일 체제 구축에 기여한 인물이다.

17) 1957년 평양 출생인 그는 군 제대 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평양시당 지도원, 사회주의노동청년연맹(사로청)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을 거쳤다. 70~

정치국 위원에, 최룡해 비서 및 인민군 대장, 박정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 위원에 선임된 반면 장성택이 정치국 위원에 선임되지 못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과 국방위원 현철해 등은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에도 선임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다. 김경희는 당내에서 김정은의 후계를 보좌하면서 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주는 내각 부총리로 그친 경우 권력에서 밀려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당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장성택과 같이 당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소위 '당 국제부 사단'의 일원이자 '장성택 사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석주는 향후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 국무장관과 같은 위상에서 미·북 관계와 핵협상 등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북한의 정책노선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 김일성 시대 정치국의 집체적 정책결정 또는 집단지도체제의 기능 복원과 함께 개혁개방 성향의 기술관료(technocrat)의 선임 여부에 주목하였으나 경제개혁 주도 인물이나 외무상 등 내각 관료들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의 대부분이 여전히 '변화'나 '개혁'과 무관한 정치 엘리트들로 충원되었다. 개혁적 인사는 핵심 당직인 정치국 32명은 물론 당 중앙위원 124명에도 끼지 못했다. '개방파'인 박봉주 전 내각 총리와 그의 측근인 김영호 전 내각 사무국장이 겨우 105명의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국이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철저히 실현하는 '거수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일, 부위원장에 김정은, 리영호, 위원에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욱,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최룡해, 장성택이 선출되었다. 그동안 국방위원회에 밀려 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이전까지 김정일 위원장까지 모두 6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이 중 3명만 유임되고 16명이 보강돼 19명으로 늘어났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장 등 국방위원들이 대거 들어왔다. 또한 리영호를 필두로 최부일 부총참모장 등 실제 무력을 지휘하는 총참모부 멤버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차지했다.

80대가 주를 이룬 당 고위직 인사들 틈에서 53세로 최연소인 그가 당 요직 몇 개를 한꺼번에 차지했다. 문경덕은 특별한 집안 배경은 없지만 충성심 하나로 현재 위치까지 오른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며, 장성택이 80년대 후반 청년사업을 펼칠 때 문경덕은 최룡해와 함께 사로청에 있으면서 홍위병 역할을 했다. 장성택과 부침을 함께 한 그가 지난 6월 최영림의 후임으로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기용된 배경에도 '평양시 리모델링' 사업을 주도해온 장성택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덕은 2002년 장성택, 박남기(전 당 계획재정부장. 화폐개혁 실패로 처형) 등과 함께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9일간(10월26일~11월3일) 남한을 다녀가기도 했다.

〈표 1〉 후계자 김정은의 후견그룹

| 분야 | 인물 | 비고 |
|-------|---|-------------------------------------|
| 당 분야 | 최통해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비서, 당 중앙군사위원 (60세) 김경희 정치국 위원 (64세) | 급부상 김정은의 고모 |
| 군 분야 | 리영호 총참모장,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68세) 최부일 부총참모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 급부상 급부상 |
| 경제 분야 | 홍석형 당 계획재정부장, 당비서 (74세) 태중수 당 총무부장, 당비서 (74세) | 개혁·개방과 무관한 인물 |
| 공안 분야 | 장성택 당 행정부장, 정치국 후보위원 (64세)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중앙군사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68세)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정치국 위원 (77세) |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우동측, 주상성을 통제·감독 |
| 대외 분야 |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당 대남비서 (68세) 강석주 내각 부총리, 정치국 위원 (71세) 김영철 경찰총국장, 당 중앙군사위원 | 대남 외교 전담 대미 외교 전담 대남 군사공작 전담 |

군 감사기능과 국방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보조하거나 군수산업을 관장해온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김정은, 리영호, 장성택 등이 선출된 것으로 볼 때 향후 국방위원회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을 통제하는 이중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앞으로 국방위원회를 대신해 선군정치 지휘부로 기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당, 군, 공안, 군수경제의 주요 간부들이 포진됨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군사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이미지 조작, 김정은 세습체제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 결집과 실질적인 국가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민군 대안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다"는 「당규약개정에 대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서」¹⁸⁾ 내용으로 볼 때 위상이 더욱 강화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당의 군 통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 제시 및 전반적인 무력에 대한 군사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고, 국방위원회는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에 따르는 무력 강화와 군수동원 및 행정·경제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영호가 김영춘, 오극렬¹⁹⁾ 등을 제치고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장성택이 위원으로

18)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28일.

19) 오극렬의 부진은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김일성 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 때 주석단 서열 7위에 올랐다. 일부에서는 그가 김정은의 '후견인'인 장성택에 맞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

선출된 것은 향후 김정일 위원장 사후 발생할 수 있는 권력투쟁 상황에서 장성택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된다.

3. 당대표자회 개최 결과 평가

1) 체제안정 추구하고 김정은으로의 점진적 권력이양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이번 노동당 지도기관은 노·장·청을 적절히 배합해 급격한 변화 대신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점진적으로 하려는 구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으로 노동당 내 후계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위원들을 통제하면서 북한군 내에서의 후계체제 구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은 ‘수령의 후계자’의 신분만으로도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으나 점차 후계자에 걸맞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 총정치국의 요직을 맡게 될 것이고, 그의 권력의 행보는 군사 분야 외 당,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정치국 위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장성택이 후보위원에 그쳤으나 사법과 공안을 담당하는 당 행정부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김경희와 함께 김정은의 후견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총애를 받았던 강관주 등 일부 김정일 측근들이 이번 인사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과거 김정일의 권력승계만큼 순조로울지는 의문이다. 가장 강력한 버팀목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정치적 경험이 일천한 것도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2) 신진세력 약진과 북·중 협력 강화

특히 이번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5월과 8월 방중 수행 인물 대부분이 요직에 임명되거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방중 당시의 지방당 책임비서 등이 이번에 대거 중앙당의 요직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중국 방문 수행단 구성이 북·중 협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당 對 당 외교’ 등

왔다. 그 연장선에서 오극렬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고사하고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총원 124명으로 재구성된 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극렬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연합뉴스」, 2010년 9월 29일.

20) Chico Harlan, “North Korea succession: Kim Jong Il appoints Jang Song Taek caretaker for Kim Jong Eun,” *The Washington Post*, August 16, 2010.

중국과 정치적 협력을 총괄하는 김영일을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국제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북·중 관계 강화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한다.

북·중 협력 강화 조짐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직전인 8월 23일 이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2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오랫동안 위축됐던 북·중간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8월 31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사령관 장요우사(張又俠) 중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군사 분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방위원회의 초청으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상장 귀보슝(郭伯雄)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 군사대표단이 10월 23~26일일 사상 두 번째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고, 변인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군 친선참관단이 10월 14~19일 방중해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면담하고 인민해방군 부대를 시찰했다.²¹⁾ 군부 고위급 상호방문 등으로 미뤄 볼 때 북·중 간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문제의 해법에서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파'가 우위를 점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북한 안정론'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²²⁾ 최근의 미·중 관계 악화는 북·중 관계를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해 북한은 당분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8월 '창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창지투(長吉圖) 개발 프로젝트'에 편승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제한된' 변화의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3) 대남 군사위협과 유화의 이중전략 지속

「조선신보」는 10월 2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 달성을 천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오늘의 국제정세하에서 나라(북한)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연계돼 있다"²³⁾고 주장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현 상황에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 나포한 '55대승호' 선원들을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남한으로 귀환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등 전형적인 강온 이중전략과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대북 전략적 사고와 노련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1)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22일.

22)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인 2009년 7월 전통파와 국제파의 격론 끝에 전통파가 승리해 대북정책을 전환해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윤승현,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0일).

23) 「조선신보」, 2010년 10월 2일.

Ⅲ.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의 과학기술정책

1. 2006~2008년 : 후계구도 논의 중단과 1차 핵실험

1) 대외환경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 12월 권력 엘리트들에게 후계논의 금지령을 내렸고, 2006년 10월에는 자신의 영구집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2월은 방코텔타아시아 은행(BDA)에서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금융제재가 한창 진행되었고, 그 결과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6자회담이 공전 중이었던 시점이다.²⁴⁾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북핵 문제는 동북아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안보상의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헌장 제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결의안(S/RES/1718)이 통과되었다.²⁵⁾

2007년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2월 13일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극적인 합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10.4 선언 등으로 대외환경과 여건이 일단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사회 냉각 분위기의 여파가 지속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대외 교류협력활동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례적인 경제협력교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북·러 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3.22~29),²⁶⁾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5.22), 북·중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차 회의(9.4)²⁷⁾ 등을 들 수 있다.

24) BDA 문제는 10개월을 끌며 6자회담의 발목을 잡았고, 북·미간에 격렬한 대결이 진행되었다. 9.19 공동성명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7월 6일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6발 등 총 7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감행했다. 결국 BDA 문제는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감행의 좋은 구실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25)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United Nations S/RES/1718(2006))은 <http://www.un.org/sc/committees/1718/resolutions.shtml>을 참조

26)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1967년 10월 북한-구소련간에 창설되어 1990년 제24차 회의까지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구소련 붕괴 후 일시 중단되었으나 1992년 9월 북·러간 동 경제공동위원회의를 재개기로 합의하여 제1차 회의(1996. 4. 평양), 제2차 회의(1997. 10. 모스크바), 제3차 회의(2000. 10. 평양)를 각각 개최하고 양자간 경제협력증진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통일부, 「북한동향」, 제832호 (2007년 3월 22일).

27) 북·중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회의는 2005년 이래 매년 북한·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는 연례 회의로서, 제1차 북경(2005. 3), 제2차 평양(2006. 5)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광업·제철부문 투자, 무역 촉진 등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일부, 「북한동향」, 제856호 (2007년 9월 9일).

2.13 합의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로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8~20)의 합의에 따른 비핵화 단계 조치이행과 관련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가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서 개최(8.7~8)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의 핵불능화 대가로 중유 95만t 지원문제가 논의되었다.²⁸⁾ 그밖에 평양 명당무역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 건설회사가 평양에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와 운영을 위한 합영계약을 체결(7.13)하였으며²⁹⁾ 9월 1일~4일 기간 중 태국 '록슬리 태평양주식회사'가 북한의 통신설비 운영문제에 합의했다.³⁰⁾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 북한의 대외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논의 금지 지시를 내리고 영구집권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는 후계체제 구축에서 대내외 환경과 여건의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³¹⁾

2) 리더십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당은 심각한 위상 저하와 기능 약화에 시달려 왔다. 사회적으로도 당의 위상과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국가공급체계의 붕괴에 따라 주민들이 자구적 차원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당의 조직·사상적 통제 자체가 형해화 되었고 지방당 차원으로 내려가면 부정부패 문제 등으로 인해 당의 영도적 위상 자체가 붕괴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김일성 사망 이후 선군정치가 시작되면서 군부는 중요 경제단위를 직접 장악하는 등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고,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실리'가 강조되고 그에 입각한 내부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내각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²⁾ 즉 북한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경제난 타개와 식량난 완화를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2000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실리주의 경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내각의 경제부처 전문가와 학자들로 이른바 '6.3 그루뻘'을 만들어 경제정책 수정방향 검토에 착수토록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01년 10월 3일 당과 내각 간부

28) 통일부, 「북한동향」, 제852호(2007년 8월 12일).

29) 평양 명당무역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 건설회사는 7월 13일 평양에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현대화와 운영을 위한 합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중앙방송」, 2007년 7월 16일. 북한의 외국기업과의 시멘트공장 현대화계약 체결은 수력발전소 건설, 미루벌 물길공사, 주택 건설 및 도시 개진·현대화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늘어나는 시멘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라스콤사는 상원시멘트에 1억 1,500만 달러 투자하여, 동 기업소 지분의 50%를 취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Financial Times*, July 16, 2007.

30) 「평양방송」, 2007년 9월 1일; 「조선중앙방송」, 2007년 9월 4일.

31)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와 체제 안정성," 「최근 북한의 내부 변화와 3대 세습체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2010년 9월 9일), p. 51.

32) 이관세, "김정은 후계체제와 당·정관계," 『한반도포커스』, 제9호, 2010년 9·10월호.

들을 대상으로 한 '10.3 담화'에서 임금의 평균주의 철폐 등 경제개혁 원칙을 제시했고, 이는 그 이듬해 가격 및 생활비 현실화, 독립채산제 도입, 분조관리제 중심의 협동농장 운영을 골자로 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화공급 부족으로 '7.1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2003년 3월의 시장장려조치에 이어 5월에 내각은 '시장관리운영 규정'을 발표해 시장과 개인의 상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대규모 종합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해 2007년에는 그 숫자가 30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북한의 실세였던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중국 어우야(歐亞) 그룹의 양빈(楊斌) 총재와 만나 신의주 특구 조성을 추진한 것도 당시 북한이 경제개방에 상당히 집중했음을 말해준다.³³⁾

이러한 경제개혁과 개방 기조를 급격히 가속시킨 계기가 바로 2003년 박봉주 내각 총리의 기용이다. 즉 '7.1 조치'의 부진한 성과에 조급해진 김 위원장은 내각 화학공업상으로 있던 박봉주를 전격 총리로 기용, 내각 인사권 등 파격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당·정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당·군 경제사업 축소, 내각 전문화 및 연소화 같은 일련의 개혁성 조치를 강행했다. 나아가 박봉주 총리는 2004년 6월 '내각 상무조'를 가동해 가족영농제 도입, 기업경영 자율화, 당의 사회적 노력동원 금지, 물자교류 및 상품도매시장 유통구조 구축, 상업은행과 무역은행 신설 등 훨씬 더 파격적인 경제개혁안을 밀어붙였다.³⁴⁾ 그러나 2005년에 들어서면서 노력동원을 금지하려는 내각 움직임에 자극받은 노동당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당·정 갈등이 본격화됐고, 급기야 같은 해 3월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가 한 달 가량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는 대의원들의 제의에 의해 회의를 연기한다"고 사유를 밝혔지만,³⁵⁾ 실상은 그 해 봄에 열린 당·정 회의에서 경제개혁 방향과 농업예산 배분 문제에 대한 보수 원로들의 반대로 의견이 갈라져 회의 진행이 어렵게 돼 박봉주 총리가 최고인민회의 연기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의한 것이었다.

그 후 노동당은 2005년 4월~9월에 권력층의 업무과오와 뇌물수수 등 비리를 대대적으로 내사했고, 박봉주 총리는 2006년 6월 자금전용을 이유로 '40일 직무정지'에 처해진 데 이어 2007년 4월 해임됐다.³⁶⁾ 박 총리의 내각 축출은 '박봉주 라인'으로 분류되던 내각 상

33) 그러나 북한이 나진·선봉지구를 대외경제의 연결 '창구'라기 보다는 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창고'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한 오승렬의 평가(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 116)와 같이 신의주 특구도 신의주 지역을 감전선으로 둘러쳐 철저히 봉쇄시킨 '북한식 개방'이었고, 따라서 그 한계가 이미 노정되어 있었다.

34) 국방위원회가 올해 1월 의욕적으로 발표한 '국가개발은행' 설립 방침도 애초 박 전 총리가 2004년 6월 경 마련한 '금융제도 개혁안'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한겨레」, 2010년 8월 22일.

35) 「조선중앙통신」, 2005년 3월 4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있는 대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연기 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를 주체94(2005)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중앙통신」, 2005년 4월 1일.

들의 무더기 해임으로 이어져 북한의 경제개혁정책은 사실상 끝나고 말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개혁에 대해 내각과 당이 갈등을 빚자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체제수호'와 '안보우선'을 내세운 당의 손을 들어줘 정책추진 과정의 제반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³⁷⁾

3) 경제발전전략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가 치러진 2003년에는 정치계 인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인사이동도 두드러졌다. 과학원 원장이었던 리광호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과학원 부원장을 거쳐 교육상을 맡고 있던 변영립이 임명되었다. 또한 식료공장 지배인을 거쳐 화학공업상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생산현장에서 활동했던 박봉주가 내각총리에 파격적으로 기용되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200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에서 의정보고를 통해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켜 생산혁신을 이룩하고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주력, 전반적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들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⁸⁾ 과학연구기관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곧 '실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와 다를 바 없다. 독립채산제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나마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관리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이 '연구소'의 성격에서 '기업소'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과학'의 등장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³⁹⁾ 박봉주 내각 총리는 또한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이 올래 내각에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국제적 과학기술교류사업을 강화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⁴⁰⁾고 강조했으며,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같은 해 6월 16일 제11

36) 박봉주는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직에서 공식 해임된 뒤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7년 5월 18일; 화폐개혁 실패 및 이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의 경질 이후 최근 박봉주 전 총리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복권되었다. 「每日新聞」, 2010년 8월 15일.

37)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을 참조. 대북 정보분석 전문가인 한기범 국정원 3차장은 대북 고급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38) 「로동신문」, 2004년 3월 26일.

39) “북한의 '경제과학'이란?” 『NK테크 웹진』, 38078호.

40) “우리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외무역을 다각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합영·투자 도입을 통해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국제경제기구들을 통한 개발협조도 장려해 나가고 있다.” 「로동신문」, 2004년 6월 17일.

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연설에서 다방면의 경제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⁴¹⁾

북한은 2005년 11월 과학원의 명칭을 ‘국가과학원’으로 개명하여 성(省)급 기관인 과학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⁴²⁾ ‘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2005. 5)’, ‘전국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운동 선구자대회(2005. 10)’ 등 각종 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중시 분위기를 고취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아울러 북한은 선진과학기술 도입 및 관련 정보교류를 위해 중국과 ‘조·중 경제기술협조협정(2005. 10)’을, 러시아와는 ‘조·러 2005~2007년도 과학협력계획서(2005. 11)’ 등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연수생을 파견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육성에 주력했다.⁴³⁾

2006년에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중시노선’이 주요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즉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한 것이다. 과학기술계의 전년도 사업평가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는 과학연구사업과 선진과학기술 도입에 집중하여 국가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 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이어 차기 5개년계획(2008~2012) 그리고 2022년까지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문을 체계적,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중장기적 포부를 제시했다. 특히 최태복 당비서가 결의서를 낭독하는 등 과학기술강국 건설의 전망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⁴⁾ 또한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자립의 사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⁴⁵⁾

박봉주 총리가 제시한 내각의 주요사업은 국방공업 발전,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가,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의 근본적 전환, 대외 경제협조사업의 전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이다.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다.⁴⁶⁾ 이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

41) 변상정,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대외협력 전망 및 정책적 고려사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책보고서 (2009.1. 19):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nk&boardId=b21dfe89b98839bdd3cfb5d8&pkey=3>.

42) 「조선중앙방송」, 2005년 11월 24일.

43) 국가정보원 편, 『북한 과학기술논문 분석』 (서울: 국가정보원, 2005), p. 2.

44)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었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4(2005)년 사업정형과 주체95(2006)년 과업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4(200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5(200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대의원이 셋째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셋째의정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선군의 기치 따라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원리에 맞게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대비약을 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데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4월 11일.

45) 「조선신보」, 2006년 4월 13일.

46) 북한 당국은 이의 78.1%를 중앙예산에서, 21.9%를 지방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없다

장은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잘 추진하면서 김일성 탄생 100돐인 2012년까지 추진될 제3차 5개년계획을 잘 세워 집행하고, 2022년까지는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⁴⁷⁾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강력한 지시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2002년 7.1 조치 이후 내각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던 노동당이 2005년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2006년까지 개혁주도세력을 축출했던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북한의 국가발전정책에서 ‘사회주의 고수’가 강화되고,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이 크게 대두된 것이다.

이 구상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기간인 2008~2012년에 경제회생의 토대를 잘 구축해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제4차 5개년계획 기간인 2017년까지 강성대국의 골조를 세운 후, 제5차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세부작업을 수행하여 강성대국을 실현하게 된다.⁴⁸⁾ 국가과학원 리의구 부원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문제가 최고주권기관의 결정으로 제정, 발표된 것 자체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이 곧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즉 과학기술발전사업이 개별적인 부문이나 단위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의 전략적인 정책으로, 전국각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⁹⁾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원과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과학기술증시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2006년도 예산사업계획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지출을 전년대비 3.1%로 소폭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여타 농업 부문에 12.2%,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9.6%의 예산 증액율과 비교했을 때 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다.⁵⁰⁾

2. 2009~2010년 : 2차 핵실험과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화

가 새로 편성된 부동산 사용료 수입을 2005년 대비 12%를 증액 편성했다. 최수영,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10월호, p. 12를 참조.

47) “새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행에 박차를 - 국가과학원 리의구 부원장에게 듣다,” 『월간 조국』, 2008년 11월호, pp. 14-19.

48) 이에 대해서는 변상정, “북한의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8-2012) 추진 동향과 정책적 고려사항,” (2010. 2. 25):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_nk&boardId=6ac72cdb4b8f2e7339734db&pkey=3〉을 참조

49) “새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행에 박차를 - 국가과학원 리의구 부원장에게 듣다,” 『월간 조국』, 2008년 11월호, pp. 14-19.

50)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는 한편, 은행을 통한 대부분 투자자금 운영 등 과학기술진흥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6년 6월 10일.

1) 대외환경

1998년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나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과 2006~2009년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2009년 2차 핵실험은 북한이 군사강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함으로써 대내 체제결속을 다지고 외교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등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다. 즉 북한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기의 재생산을 시도하는 모험주의적 정책을 구사해 왔다. 이는 북한을 블랙박스(black box)로 인식하는 외부의 북한에 대한 정세판단을 더욱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북한은 대외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⁵¹⁾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한국의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한·미·일 對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인 ‘5·24 조치’ 발표 이후 미·일의 대북 추가제재조치⁵²⁾를 이끌어내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상황에 더해 지난해 말의 화폐개혁 실패로 더욱 심각해진 경제난 타개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은 금년 5월과 8월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결과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쌀 등을 확보하는 데에서는 성과가 큰 것 같지 않으나 후계체제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⁵³⁾으로 파악된다.

2005~2006년 대내외 정세와 환경의 악화로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구도 논의를 중지시켰던 것과는 달리 2009~2010년 최악의 고립상황과 ‘고난의 행군’기 보다 더 심각한 경제여건 하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내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전격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시켰고, 향후 후계체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1) 류길재는 북한의 대외적 행태가 외부세계의 기대치와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김정일 정권하의 국가가 체제의 기본적인 틀에 위협이 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예외국가적 성격을 가지며 예외국가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의사와 권력이 체제 전체를 지배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체제 그 자체이다. 따라서 김정일이라는 개인 역시 이러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 (1999), p. 29를 참조.

52) 지난 8월 30일을 기해 발효된 13551호는 13466호에 나열됐던 ‘국가 긴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범주에다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전임 행정부 당시 발표됐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협과 무기급 화석연료의 존재를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연합뉴스」, 2010년 9월 3일.

5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9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연합뉴스」, 2010년 9월 13일.

2) 리더십

북한은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후계세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1월 8일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교시를 리제강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하달하고 이 지시가 인민군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⁵⁴⁾ 북한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했다. 개정된 헌법은 국방위원장에게 '최고 영도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방위원회는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집행하며 국방 분야를 넘어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격상시켰다.⁵⁵⁾ 그리고 올해 4월과 6월에 각각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를 이례적으로 연이어 개최하여 국가체제 정비를 완수하였다.⁵⁶⁾

지난 6월 7일 단행된 인사에서 주목할 것은 지방에서 당 조직을 이끌던 인사들이 대거 중앙무대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평양시당 책임비서였던 최영림이 신임 내각 총리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황남도당 책임비서인 김락희와 평남도당 책임비서인 리태남이 내각 부총리에 올랐다.⁵⁷⁾ 북한에서 우리의 시·도지사에게 해당하는 지방당책들이 중앙무대로 옮겨 경제문제를 다루는 내각에 진출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 경제회생을 위해 현장 사정에 밝은 지방일꾼들의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후계 구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5월 방중 때 사상 처음으로 지방당 책임비서들인 태중수(함남)와 김평해(평북)를 대동하는 파격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역시 김일성 시대처럼 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 당원들의 전통적인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관측된다.⁵⁸⁾

향후 김정은은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김일성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내부결속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철저히 김정은에 의해 완성된 결과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비해 김일성이 '선량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54) 「연합뉴스」, 2010년 1월 15일.

55)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9일. 국방위원회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공안 관련의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군 관련의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위원으로 추가된 것이다. 즉 군 관련 인사뿐 아니라 당과 내각의 공안 관련 부서장들이 국방위원회에 포진하게 되었다.

56) 북한은 이에 앞서 2008년부터 국가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법규들을 제·개정해 왔다. 2008년 '국가예산수입법'과 '토지임대법'을 개정하고 2009년에 기존의 '양정법'과 '농업법'을 개정하였으며, 올해 초 '노동정량법',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 '석탄법' 8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주민행정법', '노동보호법', '상업회의소법' 3개 법률을 제정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9일.

57) 「조선중앙방송」, 2010년 6월 7일.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를 열어 내각 총리를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58) 「조선일보」, 2010년 6월 8일.

다. 한 때 김정일 자신이 만든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뛰어넘어보고자 자신을 '전무후무한 영도자'로 선전했으나 역효과만 야기해 중단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 사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친애하는 지도자' 대신 김일성을 지칭하던 용어인 '위대한 수령'으로 바뀌 부르고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부르고 있다는데⁵⁹⁾ 이것 역시 김정은 후계구축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8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들이 권력 증추에 총원되었다.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는 국방위원회를 상징적 최고권력기구로 하면서 노동당 중심의 실질적인 권력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원회의 권능과 역할이 증대되었다고 하나 국방위원회는 하부구조가 없이 상부구조로만 이루어져 노동당, 사법·보안기관, 군부를 통해 권력을 행사해왔다. 북한 사회를 직접적으로 지도, 통제하고 있는 조직은 노동당이며 김정은이 노동당을 장악할 때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⁶⁰⁾

3) 경제발전전략 : 주체경제-주체과학에 의거한 생산성 향상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핵심인 '기계공업부문의 CNC화'⁶¹⁾와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는 후계자의 업적 쌓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2009년 실시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는 당이 주도한 속도전으로, 당 조직을 통해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선전하기 위한 노력동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성장과 후계자 업적 쌓기가 주요 목적이었지만, 이는 당이 과거와 같은 주민동원과 통제 역할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⁶²⁾

북한은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에서 산악훈련을 받았으며 3년

59) 「미국의 소리(VOA) 방송」, 2010년 9월 14일.

60) 최근 북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과도한 국방예산을 군부에 투입하고 군부의 잘못된 경제 간섭 때문에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동향도 노동당 부활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인사 L씨 인터뷰 내용, 2010년 9월 17일.

61) 북한의 CNC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밀기계를 자동으로 가공하는 일반적 CNC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공정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CNC 기술은 정밀도가 높고, 복잡한 모양을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으므로 소수 인력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국내 공작기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CNC 공작기계를 자체 개발했다면 저급한 성능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컨트롤러는 최첨단 기술제품으로 개발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독일 지멘스나 일본 파나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컨트롤러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통제가 엄격하므로 북한에 수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조악한 수준의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했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62) 이관세, 앞의 글.

간 군복무를 했다고 선전함으로써 선군정치 계승의 불변성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7월 토요일 간부학습회에서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하달했다. 지시문에서 현대 남정세를 분석하면서 "남한이 도발한 '천안함 사건'과 국제적 제재를 짓부수는 작전을 김정은 청년대장이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그 위대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당대표자회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추정되는 「선군조선의 위력」이라는 기록영화의 제작을 김정은이 지휘했다고 전해진다. 기록영화에는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북한이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핵융합기술, 미사일기술, 최첨단 화력기재들의 시범사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⁶³⁾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이 최신 군사과학에 정통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CNC(컴퓨터수치제어기술,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와 IT 개발에 대한 총지휘를 담당하여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⁶⁴⁾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국가비전을 <선군조선을 CNC 강국으로>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로 집약해 점진적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로부터 '김정은의 과학기술강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⁶⁵⁾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6년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 2022년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지난 10년 간 과학기술은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명확히 자리매김해 왔다.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후 김정은은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국력,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적경사이며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력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다.⁶⁶⁾ 또한 김정은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전초병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

63) 장세울, "김정은 후계구도 작업 진행에 대한 분석 자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비공개 세미나 (2010년 9월 17일).

64) 「로동신문」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CNC를 주제로 한 정론을 발표해 "'런하기계'가 대북제재 하에서도 CNC를 자체개발했다"며 CNC를 통한 첨단돌파를 강조했다. 심지어 북한은 CNC 찬양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이란 노래도 제작·보급했다. 「로동신문」, 2009년 8월 11일;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뒤 북한 당국은 8월경부터 전 산업시설의 CNC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평양 시내 대로변과 공장 등에 이른바 'CNC 구호'가 많이 나붙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김정은 후계구도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연합뉴스」, 2010년 9월 1일.

65)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기운차게 날아오르고 CNC기계공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졌으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된것은 우리 주체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의 주체공업은 자체의 완벽한 부문구조를 가진 공업,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발로 일어나갈수 있는 자립적인 공업이다." 「로동신문」, 2010년 8월 9일.

66)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5일.

술을 연구도입하여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다 높은 과학기술 성과로 보답할 것”⁶⁷⁾을 주문했다.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위해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생산과 평양방직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강계뜨락또르 종합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련하기계공장 등 다양한 기업에서 생산공정의 CNC화 등 기술개선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⁶⁸⁾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CNC가 ‘주체과학’과 ‘주체기술’의 새로운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고성능형의 최첨단 CNC 설비인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자동차공업, 선박공업, 우주 및 항공공업 등 공업전반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⁶⁹⁾ 나아가 북한은 기계공업의 모체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CNC화가 전국의 기계공업부문 전반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고, “CNC화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데 평양326전선공장에서는 이미 일부 가공공정들에서 무인화가 실현됐다고 한다.⁷⁰⁾

이와 같이 북한은 이중용도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의 규제 하에서 기계공업의 CNC화를 100% 자체의 기술과 지혜로 설계·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¹⁾ 이는 북한 당국이 그동안 김정일의 ‘체제안보 우선’과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EMP탄 등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집중 투입한 인적·물질·기술적 자원을 일정 부분 민수 부분으로 돌려 생산현장의 현대화·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발전(과학기술증시)을 통한 경제발전(경제강국 건설)’전략은 북한 체제의 발전경로, 즉 주체사상, 폐쇄적 계획경제와 경제-국방 병진노선 등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무엇보다 ‘체제위협적’ 대외환경 변수의 영향으로 여전히 ‘주체과학’과 ‘주체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⁷²⁾

67)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4일.

68) 북한에서 ‘기술개진’이란 공장·기업소들의 노후 설비들을 보수·정비 및 교체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현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69)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11일.

70) 『조선신보』, 2010년 10월 22일.

71)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자기 땅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CNC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쥘수 있었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팡팡 생산해내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날을 따라 몰라보게 달라지는 우리 조국의 선군만경들과 현대적으로 꾸러지는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9월 1일.

72) 이에 대해서는 변상정,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을 참조.

〈표 2〉 북한의 핵심산업 재건 현황 및 평가

| 산 업 | 현 황 | 평 가 |
|---------------|---|--|
| 제철산업 (심화철) | - 주체철의 완성으로 외국에서 수입없이 자체적으로 제철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 미분철광석 이용으로 제철생산의 자원효율성 증대 | - 제철 생산의 확대에 다소 기여 - 전력난 및 심화철의 특성에 비추어 확대, 지속은 어려움 |
| 기계산업 (자동화) | - 기계의 CNC화 활성화 - 여러 공장에서 생산자동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확대 | - 산업 생산성 확대에 다소 기여 - 부품, 전력부족에 기인해 확대 보급에는 한계 |
| 비료산업 | - 비료의 제한적 생산 | - 자체기술 보유로 제한적 생산 지속 예상 |
| 섬유산업 (비날론) | - 비날론 생산 개시 - 비날론 공장의 CNC화를 통한 생산효율 확대 | - 섬유생산에 다소 기여 - 정상화를 통한 확대, 보급에는 어려움 예상 |

출처 : 김종선,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STEPI Insight*, 제48호 (2010. 6. 15).

따라서 과학자·기술자와 기능공들을 총동원해 개발한 ‘주체식 CNC기술’을 통한 산업 재건과 생산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재건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표 2〉와 같이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료 등은 모두 부족한 석탄을 그 원료와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고, 전력과 석탄에너지 부족은 화학 산업에서 전해로를 통한 카바이드 생산, 제철산업에서 초고전력전기로 이용 등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공업의 CNC화 추진 역시 전력과 고성능 부품 부족에 따라 지속적인 CNC 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⁷³⁾

IV. 결 론

본 논문은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기와 향후 정책방향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한 데 이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했고, 10월 10일

73) 김종선, 위의 글, pp. 10-11을 참조.

당 창건 6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3대 세습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김정일이 위원장이고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보다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당, 군, 공안, 군수경제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포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영도에 의한 선군정치를 더욱 완성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까지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17차례나 언급한 반면 '2012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시한이 2012년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 2012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최악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시한 '2012년' 구호를 슬그머니 내리고, 강성대국 달성의 실패를 '미국'과 '남한'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즉 북한 당국은 미국과 남한을 강성대국 건설의 '암적 존재'라고 하면서 '조국통일 수행'이 강성대국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식 CNC화'를 통한 북한의 산업재건과 생산성 향상도 이미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전략은 북한 체제의 발전경로, 즉 주체사상, 자립적 폐쇄경제와 경제-국방 병진노선 등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무엇보다 '체제위협적' 대외환경 변수에 종속되어 여전히 '주체과학'과 '주체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문을 열어 2022년 과학기술강국을 달성하고, 과학기술이 경제재건과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각광받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함께 무엇보다 대대적인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편. 『북한 과학기술논문 분석』. 서울: 국가정보원, 2005.
- 권오윤. 『현실 사회주의 북한』. 서울: 청목, 2007.
- 김종선.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 *STEPI Insight*, 제48호 (2010. 6. 15).
- 류길재.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 (1999).
- 변상정.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 _____. “북한의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8-2012) 추진 동향과 정책적 고려사항.” (2010. 2. 25): <http://www.inss.re.kr/app/board/view.act?metaCode=r__nk&boardId=6ac72cdb4b8f2e7339734db&pkey=3>.
- 열린북한방송. 「열린북한통신 1주년 기념 세미나」 (2010년 1월 11일) .
-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윤승현.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0일).
- 이관세. “김정은 후계체제와 당·정관계.” 『한반도포커스』, 제9호, 2010년 9·10월호.
-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와 체제 안정성.” 「최근 북한의 내부 변화와 3대 세습체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2010년 9월 9일).
- 이재승. 『북한을 움직이는 테크노크라트』. 서울: 일빛, 1998.
- 장세울. “김정은 후계구도 작업 진행에 대한 분석 자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비공개 세미나 (2010년 9월 17일).
- 최수영.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10월호.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통일부. 「북한동향」, 제766호 (2005년 11월 24일).
- 통일부. 「북한동향」, 제832호 (2007년 3월 22일).
- 통일부. 「북한동향」, 제852호 (2007년 8월 12일).
- 통일부. 「북한동향」, 제856호 (2007년 9월 9일).
- 「로동신문」
- 「미국의 소리(VOA) 방송」
- 「연합뉴스」
- 「열린북한방송」
- 「조선신보」
- 「조선일보」
-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
- 「중앙일보」
- 「평양방송」
- 「한겨레」
- 「每日新聞」
- 「월간조국」
- Financial Times*
- The Washington Post*

《Abstract》

A Study on the 3rd WPK's Representatives Convention and Science-Technology Policy during the Kim Jong-un'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Period

Byun, Sang-Jung

North Korea officially started a hereditary power succession on Sept. 28 when its leader Kim Jong-il named his youngest son a military general and its ruling party gave him key political posts during the 3rd WPK's Representatives Convention, the biggest party convention in decades. North Korea appointed its leader's youngest son, Kim Jong-un, as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s a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Kim Jong-un will strengthen his grip on the military that operates 1.2 million troops and forms the basis of the Kim dynasty's power. Kim Jong-il has apparently accelerated his hereditary succession plan since he suffered a stroke in 2008.

This study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rovides the hypothesis that establishes external circumstances, governing ideology, leade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nalyzes characteristic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under Kim Jong Il's era as dependent variables.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its strongest ally China is growing as its economy slips further into deeper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ts nuclear ambition.

In result,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and revitalizing external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Kim Jong-il's regime strive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reconstruction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external circumstances, governing ideology, systemic limit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path dependence, which is comparably not different from Kim Il-song's era, made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Kim Jong-il's era and the Kim Jong-un's hereditary power succession period remain in the range of Juche science in the past.

〈동북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31호)〉

Key Words : The 3rd WPK's Representatives Convention, Kim Jung-un, Hereditary
power success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NC

투고일 : 2010.10.30 / 심사일 : 2010. 11.5 / 심사완료일 : 2010.12.20.